

[보도자료]

- ▣ 차별에 저항하라! 4월20일 장애인의 날을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 ▣ 31년만의 변화, 대중투쟁과 연대를 통해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하자!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서울 종로구 동숭길 25 유리빌딩 5층 / 전화 : 02-739-1420 / 전송: 02-6008-5101
전자우편 : sadd@daum.net / 홈페이지 http://www.sadd.or.kr

발 신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제 목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기원!” 달(MOON) 맞이 광화문 농성 돌입 기자회견
배포일자	2019년 4월 12일 금요일
담 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 정다운
분 량	총 4매

<본 자료는 www.sadd.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31년만의 변화를 맞이하는 ‘장애등급제’
OECD평균 4분의 1 수준의 장애인의 삶을 바꿔낼 수 있어야!
‘감옥’ 같은 장애인거주시설 이제는 폐쇄하자!*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기원!” 달(MOON) 맞이 광화문 농성 돌입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9년 4월 15일(월) 오후 4시. 광화문광장 지하 해치마당
- 주최 : 2019년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 기자회견을 마치고 농성에 돌입합니다. 이후 매일 7시 저녁문화제가 진행됩니다.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420공투단’)은 정부가 정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이 장애인의 수많은 차별과 억압을 은폐시키는 날로 기능하기에 이를 단호히 거부하고, 모든 차별에 맞서 함께 싸워나가는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만들어나가기 위해 장애·인권·노동·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공동투쟁기구입니다. (*2019년 4월 12일 현재 약 120여개 단체)

3. 420공투단은 지난 3월 26일과 27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OECD 평균 수준의 장애인복지예산 확대를 전제로 한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요구하며 전국 500여명 규모의 1박2일

투쟁결의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의 재정 및 예산을 총괄하는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의 요구를 외면하였고, 31년만의 장애등급제 폐지는 무늬만 바뀐 ‘가짜 폐지’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4. 오는 7월 기존 장애등급제를 대체하여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가 적용되는 돌봄 영역 4가지 제도는 ‘장애인활동지원/보조기기/응급안전’ 그리고 ‘거주시설 입소’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은 ‘탈시설’을 공약으로 약속하였지만, 문재인정부는 거주시설 입소를 원하는 장애인과 그 가족이 있다는 핑계로 거주시설 ‘신규입소’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5. 그러나 이는 ‘장애등급제’라는 낙인을 도구삼아 장애인의 권리를 제한하고, ‘장애’와 ‘빈곤’의 문제를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전가하여 “하는 수 없이” 거주시설을 선택할 수 없었던 장애인의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입니다. 올해도 경기도 오산시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성심동원 산하 성심재활원에서 거주인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하였고, 부산 동향원에서도 끔찍한 인권유린이 발생하는 등 거주시설은 ‘감옥’이자 인권의 사각지대라는 것이 재차 확인되고 있습니다.

6. 서울의 ‘프리웰’, 대구의 ‘시립희망원’, 경기의 ‘성심재활원’, 부산의 ‘동향원’ 등 범죄시설은 당장 폐쇄되어야 하며, 거주인들은 다른 시설로 전원조치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지원이 이뤄져야 합니다. 그리고 향후 10년 이내에 전국의 모든 장애인거주시설이 폐쇄되어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과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7.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과 참여’는 말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차별받는 구체적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정책과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문재인정부가 지향하는 ‘포용국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초생활/사회서비스/노동/주거/교육/이동/문화예술’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같이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적극적 조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8. 이에 420공투단은 39번째 ‘장애인의 날’을 5일여 앞둔 4월 15일 광화문광장 지하 해치마당에서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기원! 달(MOON) 맛이 광화문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4월 20일까지 농성에 돌입합니다. 농성을 통해 시민들에게 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의 의미와 함께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장애등급제 폐지가 ‘가짜 폐지’라는 것을 알리고,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 제정의 필요성과 OECD 평균 수준으로의 예산 확대를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9. 이에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붙임자료] 2019년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정책요구안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기원!”
달(MOON) 맞이 광화문 농성 돌입 기자회견

사회:

0. 민중의례

1. 여는 발언	박옥순(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총장) - 문재인대통령만남 추진위원회 보고
2. 연대 발언	최인기(민주노점상전국연합 수석)
3. 투쟁 공연	김종옥(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회장)
4. 당사자 발언	이봄(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 탈시설 당사자)
5. 투쟁 발언	(부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
6. 닫는 발언	최용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농성 주요 일정]

요일	4/15(월)	4/16(화)	4/17(수)	4/18(목)	4/19(금)
일정	4시 농성 선포 기자회견 7시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기원 달맞이 놀이	7시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기원 달맞이 놀이	7시 故송국현 5주기 추모제	7시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기원 달맞이 놀이	2시 농성 보고대회
지역 사수	서울+인천 영남(대구,부산,울산)	경기 중부(충북,대전,강원)	경기 호남(광주,전남,전북)	서울+인천 영남(경남,경북)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보장	장애인거주시설폐쇄 및 탈시설정책 강화	장애인권리중심 공공성 보장 전달체계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활동지원 권리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의 욕구·필요도 반영 - 하루 24시간 보장 제도화 - 65세 연령제한·본인부담금 폐지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권리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루 8시간/ '20년 1만명 보장 ■ 장애인보조기기 권리보장 ■ 장애인의사소통 권리보장(청각/발달/뇌병변) ■ 개인별 지원서비스 다양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년 내 장애인거주시설 완전 폐지 ■ 장애인거주시설 신규입소 금지 ■ 장애인지원(자립생활)주택 2만호 공급 ■ 탈시설정착금·주거서비스 예산 확대 ■ 2022년까지 대형시설(30인이상) 30인 이하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에 장애 유형 및 개인별 필요도 반영 ■ 수급자격심의위원회 권한 강화 및 당사자 참여 보장 ■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강화 ■ 탈시설지원센터 설치 ■ 뇌병변장애인 종합지원대책 및 전달체계 마련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 노동 및 소득 보장	장애인 교육 및 주거권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폐차 시내버스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 고속·시외·마을버스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 장애인 단체이동권리 보장 ■ 모든 교통수단의 장애인 접근권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 (고용노동부) 중증/발달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개 보장 ■ (고용노동부)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삭제 ■ (보건복지부) 장애인일자리 '20년 8,000명 증원 ■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문화예술 공공일자리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통합교육 강화 ■ 장애인 평생교육 강화 ■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 ■ 장애인 주거지원 국가계획 수립 ■ 공공임대주택 장애인지원주택 제도화 ■ 편의시설설치 의무화 ■ 주택개조지원 제도화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법률 제·개정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
장애인거주시설 폐쇄법 제정	장애인연금법 개정
장애인차별금지법 실효성 강화	장애인 등 특수교육법 개정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의료급여에서 부양의자기준 완전 폐지